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참 고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	2021.2.22.(월)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은행과장 박 민 우(02-2100-2950)	<b>담 당 자</b>	서지은 사무관(02-2100-2954)
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	윤현철 서기관(02-2100-2831) 황기정 사무관(02-2100-2832)
	금융위 보험과장 김 동 환(02-2100-2960)		태현수 사무관(02-2100-2961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중 훈(02-2100-2990)		서병윤 사무관(02-2100-2991)

**제 목 :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의  
연장과 함께 코로나19 금융조치들의 질서 있는  
정상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**

- ◆ 2월22일(월), **금융위원장은**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, 주요 금융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
- 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**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**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
- 유예 종료후 차주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「**연착륙 지원 5대 원칙**」에 따라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함
- ②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**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**을 구축하여
- 정책당국이 **상황진단 및 대응방향성(forward guidance)**을 주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
- ③ 「포스트 코로나」를 대비한 뉴딜펀드, 혁신기업 지원, 디지털 금융혁신,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**2021년도 주요 금융정책 과제**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

## 1 간담회 개요

- '21.2.22일, 금융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,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.

### ◇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요

- 일시 / 장소 : '21.2.22. (월) 14:00 / 뱅커스클럽
- 참석 : (금융위) 금융위원장, 사무처장 / (금융협회장) 은행연합회장(김광수), 생명보험협회장(정희수), 손해보험협회장(정지원), 여신금융협회장(김주현), 저축은행중앙회장(박재식)

## 2 주요 논의사항

### 가. 全 금융권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장

-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全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.
  - 다만,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위기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권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실물분야 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, 금융권 자체도 손실부담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- 금융협회장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, 실물경제 여건,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할 때, '21년 3월말 시한도래 예정인 만기 연장·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조치 그대로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.
  -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,
  - 만기연장·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금융부문의 위험이 누적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 변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,

-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“연착륙 지원 5대 원칙”에 따라 당국과 함께 다양한 장기·분할 상환방법을 마련하여 제시(3월초)하기로 하였습니다.

#### <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>

- (i)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**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** 제공
- (ii)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**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**  
\*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
- (iii) **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·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**  
\*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
- (iv)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**조기상환**을 원하는 경우 **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**
- (v) **최종적인 상환방법·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**

- 또한, 참석자들은 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장 등에 따른 금융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\*의 연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.

\* [은행] 외화/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(~'21.3말),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(~'21.6말)  
[저축]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,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(~'21.6말) 등

## 나. 금융대응조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체계 구축

- 금융위원장은 그간 추진해 온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- ①취약차주 지원은 보다 두텁게, ②시장기능 작동은 원활하게, ③정책금융 지원은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기본원칙 하에
- ①방역상황, ②실물경제, ③금융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계량 지표와 정성판단을 종합 고려하여 상황을 진단하고
- 정상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구체적인 대응조치 별로 점진적·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,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.

- 또한,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[‘포워드 가이드스’(forward guidance)]을 주기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- 금융협회장들은 당국의 ‘포워드 가이드스’가 현 위기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.

## 다. 2021년도 주요 추진과제 논의

- 참석자들은 ‘포스트 코로나’ 대비 전략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업권별 준비상황과 ‘한국판 뉴딜’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.
-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‘포스트 코로나’에 대비한 혁신적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.
- 특히, 올해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될 ‘정책형 뉴딜펀드’에 대하여 산업계, 운용사에서 많은 관심\*을 보이고 있는 만큼,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투자 기회 제안, 매칭투자 등 ‘뉴딜투자 붐(boom)’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하였으며,
  - \* 1.26일 자펀드 운용사 접수결과, 1차 목표액(3조원)의 3.2배에 이르는 9.7조원의 제안 접수 / 2.4일, 산업계-금융계가 함께 미래차 자펀드 설립을 위한 MOU 체결
-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혁신기업들에 대하여 ‘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’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정책금융이 자금을 지원하면서, 민간자금도 투자·대출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.
- 아울러, 참석자들은 디지털 금융혁신,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주요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.

- 금융산업, 핀테크·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, 규제,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- 현장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.
- 올 7월 예정된 법정최고금리 인하(24%→20%)로 중·저신용자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
- 중·저신용자가 위험 대비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는 한편,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 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